

9000만원 넘는 고가전기차 보조금 지원 없다

정부,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서 무공해차 구매 지원 제도 개편 방안 발표

정부가 올해 1조4,000억원을 들여 전기·수소차 13만6,000대 구매를 지원한다.

배터리 효율성이 높은 전기차에 더 많은 보조금이 가도록 전비(단위 전력당 효율성) 비중을 높이고,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차량의 경우 최대 50만 원을 더 지급한다.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수요가 높은 초소형 화물차의 보조금은 현행 512만원에서 600만원, 전기택시의 보조금은 최대 82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각각 늘린다. 수소트럭에 대한 보조금도 신설한다.

반면 테슬라 모델S, 벤츠 EQC, 아우디 e-트론 등 9,000만원이 넘는 고가의 전기차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8일 '혁신성장 BIG3(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추진회의'를 열어 이 같은 무공해차 구매 지원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2030년까지 전기·수소차 385만대(전기차 300만대, 수소차 85만대) 보급을 목표로 차량의 성능·효율 향상과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게 골자다.

그간 높은 수준의 보조금 지원 정책에 전기·수소차 판매 비중은 이륜차를 제외하면 전체의 2.9% 수준에 불

과한 실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 잠정 집계된 자동차 판매량 180만대 중 전기·수소차는 5만3,000대였다.

이에 정부는 올해 전기·수소차 구매 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32% 확대한 1조3,88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원 물량은 13만6,000대로 지난해의 11만대보다 2만6,000대 늘어난다. 특히 환경 영향이 크고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주로 이용하는 전기화물차의 지원 물량을 1만3,000대에서 2만5,000대로 약 2배 확대한다.

고성능·고효율 차량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보조금 계산 시 주행거리보다 배터리의 효율성을 반영하는 전비 비중을 50%에서 60%로 높이기로 했다. 배터리 효율성이 높은 전기차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상온 대비 저온 1회 충전 주행거리 비율을 조기 달성하는 에너지 효율 차량에는 최대 50만 원을 더 지급한다.

차량 성능에 따라 지방보조금도 일률 지급에서 차등 지급으로 전환하고, 수소차의 경우 보급 초기인 점을 감안해 보조금 지원단가를 유지한다.

무공해차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가격 구간별로 보조금 지원 기준을 0~100%까지 차등화한다.

9,000만원이 넘는 고가 전기차의 경

우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테슬라 모델S, 벤츠 EQC, 아우디 e-트론 등이 해당된다.

테슬라 모델3(LR·Performance)와 BMW 3 등 6,000만원 이상 9,000만원 미만인 차량의 산정액은 50%로, 현대 코나와 기아 니로 등 6,000만원 미만인 차량은 산정액 전액을 각각 지원한다.

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 차량에 지원하는 이행보조금도 목표 달성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대상 기업은 현대, 기아, 르노삼성, 한국GM, 쌍용, BMW, 벤츠, 아우디 등 10개사가 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초소형 전기화물차 보조금은 512만원에서 600만원까지 늘리고, 중소기업에 물량을 화물 전체 물량의 10%로 별도 배정하기로 했다.

법인의 무공해차 전환 가속화를 위해 리스·렌터카 등에는 보조금 지원 물량을 40%로 별도 배정한다.

또 대기질 개선 효과가 높은 상용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전기택시의 보조금을 최대 82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전기버스의 경우 보급 물량을 650대에서 1,000대로 확대하고, 차량가격 인하 추세를 반영해 대형버스 보조금 지

원단가를 1억원에서 8,000만원으로 낮춘다. 저가 전기버스로 인한 시장 교란 방지를 위해 구매자 최소 자기 부담금을 1억원으로 설정한다.

수소버스의 경우 보급 초기 단계인 점을 감안해 보조금 지원 단가를 유지한다. 지원 물량은 60대에서 180대로 확대한다.

수소트럭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4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신설하고, 수소상용차 개발 시기와 연계해 차종별 보조금을 만들기로 했다.

수소상용차 연료보조금도 도입한다. 보조금 단가는 전기차 연료비 수준을 감안해 1kg당 3,500원 수준으로 산정할 예정이다. 보조금 재원은 현행 가보조금처럼 자동차세 주원분(지방세)으로 한다.

아울러 전기이륜차의 보급 물량을 1만1,000대에서 2만대로 확대하고, 배달용으로 주로 이용되는 소형 전기이륜차의 보조금 지원 단가 260만원은 유지한다. 저가 이륜차의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 최소 자부담금(경형 75만원)을 설정하고, 사후 서비스(A/S)의 무기간과 보험증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업계와 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오는 21일께 보조금 지침을 확정·발표한다. /뉴시스

첨단장비로 대기오염물질 실시간 측정

도 보건환경연구원, 대기질 정밀측정차량 운행 오염현황 지도로 표현해 한눈에 확인 가능

전북도는 청정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첨단장비를 활용한 대기오염 실시간 측정 시스템을 도입한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유택수)은 올해부터 첨단장비를 탑재한 정밀측정차량을 이용해 산업단지 및 주요 도로 오염물질을 실시간 측정하는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1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는 대기질 정밀측정차량은 산업단지에서 배출하는 300여 종의 휘발성유기화합물과 차량에 의해 발생하는

재미산 먼지를 실시간으로 측정 분석한다.

정밀측정차량인 분석 결과를 지도로 표현해 오염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탑재하고 있다.

공기를 포집한 후 실험실에서 분석하는 방법은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악취물질 특성상 검출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정밀측정차량을 이용하면 악취물질도 실시간으로 미

량 검출할 수 있어 불법 배출 사업장의 추적에도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로에 쌓여있던 먼지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발생하는 도로재미산먼지를 측정해 현황을 체계화할 계획이다.

연구원은 시·군의 도로 청소용 살수차량 운영을 객관화된 데이터로 나타내 오염지역에 효율적으로 투입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유택수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첨단 장비를 장착한 대기질 정밀측정차량으로 대기 오염물질에 대한 정보를 더욱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며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서는 전북도와 시·군 담당자들의 유기적 협조가 절실하기 때문에 측정결과를 공유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며, 대기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전북도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배달 음식점·도시락류 판매업체 단속

도, 배달앱 통해 조리식품 판매하는 음식점 등 업소 100개소 대상 22일까지 식품 위생·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집중 점검

전북도가 11일부터 오는 22일까지 2주간 배달 음식점과 도시락류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및 방역 실태를 집중 단속한다.

도 특별사법경찰팀은 최근 온라인을 통한 음식 구매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배달 음식점 및 도시락류 판매업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2주간 특별 단속을 펼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은 배달앱을 통해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음식점 등 업소 100개소를 대상으로 식품 위생 및 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기본수칙,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분야별 단속사항으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역 기본수칙(마스크착용, 출입자명부관리, 소독환기) 준수여부 ▲일반음식점 21시~05시 사이 포장·배달 준수여부 등이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따른 ▲무신고영업 또는 무신고, 무표시 제품 사용여부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여부 ▲냉동·냉장식품, 신선편의식품 등의 적정정보관 및 판매 여부 등을 점검한다.

이번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 등 계도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사법 처리 및 시·군에 통보할 예정이다.

도 민생특별사법경찰팀 관계자는 "식품위생 등 민생 7대 분야 및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도민 생활 안전과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불법적인 행위를 발견할 경우 전북도 민생특별사법경찰팀(280-1399)으로 적극적으로 제보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팀장급 정기인사 단행

전북도가 11일자로 팀장급 75명에 대한 2021년도 상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필수보직기간 이상 근무자 중 희망자, 실국장 부서 추천제를 우선한 배치를 원칙으로 했다.

또한, 조직의 안정성과 업무 연속성을 고려해 전보를 최소화했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대응에 따른 피로도를 고려한 인사배치와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승진인배 및 순환전보했다.

아울러, 정부뉴딜 등 신산업육성을 위한 ICT산업기반팀장을 신설하고, 책임자를 엄선해 배치하는 등 인력강화를 통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그 밖에 눈에 띄는 점은 오는 7월 1일부터 출범이 예정된 자치경찰제 대응을 위한 자치경찰TF팀장을 신설했다.

하태욱 전북도 총무과장은 "코로나19 사태에 적극적인 대응과 신산업 육성 등에 주안점을 둔 인사조치로 韓致遠(영정치원) 전복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발언하는 전해철 장관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모집 전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현영**

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

스피치·긴장해소·웃음치료(힐링)·면접

스피치학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북에서 최초로 개척한 김양욱입니다. 스피치학, 면접 등 제대로 배울려면 역시 김양욱입니다.

▷ 전담교수 주요경력 <

- 전주교육대학교 전담교수
- 전북대학 토론과 면접 담담교수 역임
- 스피치자격시험 감정위원장
- 한국스피치·음성협회 전북회장
- 전북인재교육원 및 기관, 단체 특강교수
- KBS TV 아침마당, MBC TV, JT, TEN 출연 및 강의자
- 스피치 칼럼리스트 ○전주매일 부사장
- 저서 '365스피치커뮤니케이션' '나를 세운 말.말.말' '스피치 노하우' 등

〈전북도내 각 지역별 모집〉		
학교명	주요과정	지역별(자유선택)
전주교육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 최고지도사(자격증) 스피치웃음치료(자격증) (주, 야간)	전주, 임실
우석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 최고지도사(자격증) 스피치웃음치료 (주, 야간)	전주, 완주, 진안
군산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 최고지도사(자격증) 스피치웃음치료(자격증) (주, 야간)	군산, 부안, 서천
전북과학대학교(정읍)	스피치지도사(기초, 고급, 자격증) (스피치, 긴장해소, 웃음치료 등) (주, 야간)	정읍, 고창
익산스피치(원광보건대)	스피치웃음치료(야, 주간반)(웃음자격증)	익산
남원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기법과 웃음치료(야)(웃음자격증)	남원, 장수, 순창
김제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웃음치료(웃음자격증)	김제, 부안

상담전화: 285-6676, 231-6669, 010-7304-5665(주, 야)
**수시 선착순 모집하여 학교별로 개강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